

2025년 수능, 어떻게 바뀌나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방지... 이의 심사대상에도 추가

킬러문항 배제·EBS 연계율 50% 연계 교재 그림 등 활용 제한도 높여 출제본부 꾸러 문제 유사성 점검 6월 모의평가부터 심사대상 포함 출제인력 검증·선정 등 체계화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정부 방침대로 '킬러문항'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 채 출제된다. EBS 연계율은 50% 수준으로 유지된다. 출제본부는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을 활용해 수험생들의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 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8일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능·사교육 '유사성 검증' 출제진 합숙 중에도 이뤄진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과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평가원은 올해도 수능을 적정 난이도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와 동일하게 출제과정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교육방송(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간 연계율은 50% 수준을 유지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

일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유사성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23학년도 수능에서 '판박이' 논란을 빚었던 영어 23번과 같은 문항이 나오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제본부가 꾸러진 뒤 사교육 모의고사·문제지와 유사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출제 예정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 모의고사 간

유사성은 현직교사들로 구성된 수능출제점검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나오면서 9월 모의평가 때부터 문항 점검을 해왔다.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 심사 대상에 추가

수능 이의 심사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출제 오류 등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교육과 연관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 심사기준에 포함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출제인력 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인력 검증과 선정, 관리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출제인력은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 검증한 뒤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최종 출제위원은 이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한다.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

수도 강화해 출제자의 출제 경력 노출 이력 등 사교육 유착 내용 적발 시 출제인력 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업계 사이의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능도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국어영역에서 독서, 문학은 공통과목으로 치러지며, 이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 I·II와 함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영재학교 졸업생, 의약학계열 62명 진학

올해 전국 8곳서 110명 지원 지난해 164명 지원, 83명 진학 교육비·장학금 4.2억 환수 영향

올해 전국 8개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을 지원한 학생 110명 중 62명이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교에서 의대로 진학한 학생이 작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대 진학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 중 의약학계열에 지원한 학생은 110명으로, 이 중 62명이 의약학계열에 진학했다. 진학자 62명 중 수시 54명, 정시 8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64명이 지원해 83명이

진학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수치다.

그간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로 진학하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가 영재학교·과학교 출신이 의약계열에 진학할 경우 교육비·장학금을 반납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교육·연구 활동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8개 영재학교가 의약학계열 지원·진학자에게 환수한 교육비는 4억2130만원(66명)이었다. 입학자는 62명이지만 '지원'만으로도 환수하는 고교가 있어 환수 대상은 66명이었다.

의약학계열 지원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과학교등학교로 학생 총 35명이 지

원해 2억5243만650원의 교육비를 반납했다. 경기과학교등학교는 18명으로부터 8100만원을 환수했다.

일각에서는 장학금과 교육비를 환수하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공계특성화 대학에 진학한 뒤 다시 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정부 '의대 증원'에 따라 '의대 쏠림'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에서 의약학계열로 진학 시 교육비나 장학금 환수 조치에 따라 의약계열 진학 학생들이 다소 줄었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약계열 진학감소 추세가 꺾일 우려가 있다"라며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현상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시교육청, 온라인학교 과목개설 신청 받아

서울 통합온라인학교, 내년 3월 개교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 통합온라인학교의 과목 개설 신청을 4월 1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온라인학교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생길 수 있는 지역별·학교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설립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과목 개설 신청을 바탕으로 서울온라인학교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과목 개설 신청은 서울 관내 일반고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교는 주문형 과목과 개방형 과목을 서울시교육청으로 신청하며, 학생들은 학생 개설형 과목을 콜라캠퍼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콜라캠퍼스는 서울시교육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지원시스템이다. /이현진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대구·경북 의료분야 中企 글로벌화 지원

중진공-케이메디허브와 맞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구경북 지역 의료분야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대구 동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과 의료산업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 내용에는 ▲의료산업 창업활성화 및 혁신성장 기반구축 ▲의료산업 유망기업에 대한 밸류업 지원 ▲기업별 맞춤형 구인·구직 매칭, 연수 및 우수인력 육성 등이 두루 포함됐다.

특히 두 기관은 국내 유망 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두바이, 시카고, 워싱턴DC 등 의료산업 거점에 위치한 중진공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연계해 '한국형 메디콘'의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오른쪽)이 28일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양진영 대경첨단의료산업재단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료산업 유니콘 기업) 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강석진 이사장은 협약 관계자와 케이메디허브 의료기기센터 방문해 첨단의료복합기술과 인프라를 살펴보고, 의료기기 제조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한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천시, 올해 일자리 15.4만개 창출 목표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인천시가 민선 8기 일자리 60만 개 창출 공약 실행을 위해, 올해 15만 4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한다.

인천광역시청은 청년에서 노인까지 전 계층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4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일자리공시제 목표 고용률(15~64세 기준) 68.6%, 15만 4000개 일

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는 지난해 대비 388억 원 늘어난 총 1조 3595억원(민자제외)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2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1%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3년에는 연차별 목표(146,079개) 대비 1만 1985개 많은 15만 8064개를 달성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일자리공시제부문 대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최근 개선되고 있는 여러 고용지표와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원 기록, 인구 300만명 돌파 등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종합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올해 일자리 대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지역주도 일자리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5대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